

보도자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장 김도형 서기관 홍정우 ☎ 02-6902-8481
 기획재정부 전략기획과장 박일영 사무관 김봉준 ☎ 044-215-4911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 최원영 사무관 권순재 ☎ 042-481-446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 발표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근로환경 개선, 구인·구직 정보 확충 등
중소기업 3대 미스매치 해소 대책 추진 -

“특성화고 졸업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병역문제 때문이지요. 유능해도 우리가 3년을 기다려줄 수도 없고, 제대 후 우리 회사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충북 B사)
 “어른들이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말을 하는데,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학생들이 눈을 낮추지 않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환경부터 대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요.” (서울지역 대학졸업생)

-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약·핵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정보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2일(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의 3대 원인인 **숙련, 보상,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숙련 불일치 해소: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공급

- 먼저, 미충원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기능인력(50%)**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군복무**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의 **경력단절 해소와 선취업 확산**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 청년층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한다.
 - 정부는 뿌리산업·전략산업, 산학연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우선 지정하는 등 업체수를 **확대**하고,
 -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관공서 공익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내년에 1천명을 우선 확대하고, '17년까지 2천 5백명을 추가해 현재 3천명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5천 5백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 ※ 관공서의 감축된 인력은 필요시 여성, 장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대체
- 중소기업 현장기능인력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병으로 근무하는 '**맞춤특기병제**'도 새로 도입된다.
 -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군 기술병**으로 선발하는 '**맞춤특기병제***'를 신설, 내년도 **1천명 규모**로 시범 실시 후 점차 확대기로 하였다.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 특기병으로 선발, 군복무(기술병) → 전역 시 취업지원
 - ※ 중소기업 직종과 관련된 군 기술병은 육군의 경우 4만명 규모 수준임

○ 아울러, 고등학교를 나와 바로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선취업** 하더라도 **장교, 명장, 교수** 등 다양한 **경력경로**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하여 평생 경력경로(학교→선취업→능력개발 및 보직경로)를 개발, 기업·학교에 보급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해주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올해 18백명 규모를 시작으로 '17년까지 36백명으로 확대하고,

*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학 3·4학년, 전문대 2학년 학생들의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 지원

- 학사제도 유연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 **산업계** 관점의 **대학 교육도** 보다 **강화**한다.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3년 2,184억원, 51개 대학)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단순생산인력(35%)** 미스매치 해소는 저소득층·장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통해 지원한다.

○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와 학교 밖 **위기청소년**(소년원 등) 대상 맞춤형 훈련으로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 취업성공패키지 중소제조업 취업목표: '13년 13천명 → '14년 17천명

○ 퇴직 전 전직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을 현행 90일 이내 이직예정자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 또한, 청년·장년인턴, 새일여성인턴, 시니어인턴 등 각 부처 **정부 인턴사업**을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 대기업·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 지원수준 우대

□ **고급기술인력**의 맞춤형 공급을 위해 **퇴직전문인력**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한다.

○ **수출, 마케팅, 관리** 등 대·중견기업 퇴직자의 분야별 Pool을 구성하고, **채용 장려금***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재취업**을 지원한다.

* 전문인력 1명당 사업주에게 연간 1,080만원 지급 (매년 1,500명)

○ 퇴직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산업현장 교수단**을 1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 석·박사 병역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업체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보상 불일치 해소: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 대·중소기업 간 고용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동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고용환경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 그간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오랜 정부지원희망 사항**이었던 **산업단지 공동기숙사** 건립을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한다.('14년 6개소)

○ 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체력증진·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14년도 신규사업, 100억원)도 새롭게 지원된다.

○ 아울러, 교통편의를 위해 **공동 통근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를 확대 (현재 9개→약 20개)하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도 대폭 확충 ('14~'15년 약 100개소)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조사 후 개별 여건에 적합한 어린이집(국공립, 직장 등) 설치

○ 산업단지 입주업종 다양화를 위해 혼합적 토지이용(산업+지원+공공 시설)이 가능한 **'복합용도제'**를 허용하고,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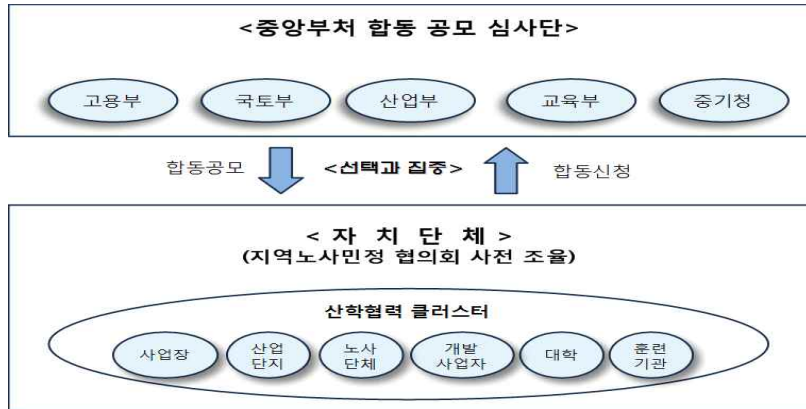
□ 특히, 이번 대책에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 사업들을 **부처 합동공모**를 통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문화·복지·보육시설, 교통편의 지원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하고,

-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우선순위 배분 및 사전 조정을 거쳐 각 사업을 권소사업 형식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신청을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유관사업(예시)>

-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호텔, 문화·복지시설), 산학 융합지구
- 국토부: 미니복합타운사업(산단조성,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산단재생사업
- 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사업(체력단련실, 목욕시설)
-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대학)
- 중기청: 중소기업 건강진단프로그램(컨설팅)



● 정보 불일치 해소: 구인·구직 정보 확충 및 동반성장형 인력양성체계

-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민간의 분산된 일자리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 청년층 '청년포털' 및 '대학별 워크넷' 구축, 장년층 '채용기업정보DB', 경력 단절여성 '시간선택적 일자리DB' 등 특화된 기업·채용 DB 확충

- 아울러, 현재 약 1만 5천개인 '강소기업' 중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강소기업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숙박업 등을 제외하여 '강소기업' 1만개를 재선정하고,

- 기업정보를 지역·업종·규모별로 손쉬운 검색기능과 현장방문 후기·사진·동영상 게재 등 청년 친화적인 생생한 정보로 개편하고,
- 실시간 구인정보까지 추가하여 민간·대학·자치단체에 강소기업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중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재직자 성과보상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 5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기업(1/3)과 본인 납입금(2/3)으로 구성된 성과보상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금처리 등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단위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인력수요조사→훈련→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13년 인천, 천안·아산,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 시범 → '17년 전국 확대

- 방하남 장관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하반기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 "향후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이번 대책이 잘 작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홍정주 서기관(☎ 02-6902-8481, CP 010-5575-15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2013. 10. 2.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인력수급 불일치 실태 및 원인	1
II.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6
1. 취약핵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7
① 현장기능인력: 청년층 경력단절 해소와 선취업 확산	7
② 단순생산인력: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	8
③ 고급기술인력: 퇴직전문인력과 여성의 중소기업 연계 강화	9
2. 대·중소기업 간 고용환경 격차 완화	10
①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10
② 산업단지 유관사업 패키지 지원	11
3. 정보 미스매치 해소 및 인력양성체계 구축	12
①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	12
② 동반성장형 인력양성으로 인력공동관리체계 정착	13
III. 향후 추진계획	14
<붙임> 중점 추진과제	15

I. 인력수급 불일치 실태 및 원인

1 현황

- 중소기업 미충원 인원¹⁾은 86천명 수준(미충원율 16.4%), 전체 미충원 인원(93천명)의 92.5%가 중소기업에 존재('13.4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업종별로는 제조업(43.9%),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기업(54.1%), 직능단계별로는 현장기능인력(50.8%)에서 불일치가 심함
-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하여 비수도권·비광역권 등 지방 중소기업 미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미충원율(%) : (수도권) 16.0 ↔ (비수도권) 16.9, (대전) 13.6 ↔ (충북) 20.8
(대구) 16.8 ↔ (경북) 19.3, (부산) 16.6 ↔ (경남) 21.4

- 중소기업은 재직자의 50%가 근속연수 3년 미만으로 이직률(3.7%)이 대기업(1.2%)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황
-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청년 비중은 16.2%로 전체 제조업 청년취업자 비중(25.8%)보다도 낮음

* 전국 제조업 고용의 47%, 생산의 58%, 수출의 79%를 담당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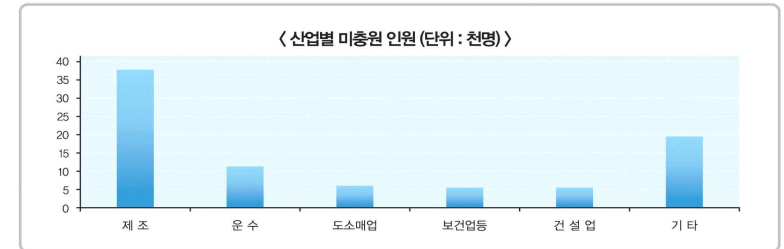
- 한편, 청년층 고용률(24.2%, 15-24세)은 OECD(39.7%)보다 크게 낮아 비경활인구가 많고,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유휴인력이 상당히 존재
- ※ 청년층(15~29세) 비경활인구는 541만명, 실업자는 31만명(실업률 7.4%)

❖ 유휴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유도 및 근속여건 마련 등 중소기업 미스매치 완화로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

1) 사업체의 100% 가동을 전제로 한 잠재적인 인력수요인 인력부족인원은 현재 26.3만명임. 이번 대책은 구인·구직 미스매치의 직접적인 결과인 미충원인원(86천명)에 집중
* 미충원인원 = (구인인원-채용인원), 미충원율(%) = {(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

참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실태

- 중소기업(300인 미만) 미충원 인원(86천명)은 업종별로는 제조업(38천명)이 전체 미충원인원의 43.9%를 차지



-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47천명)이 미충원인원의 5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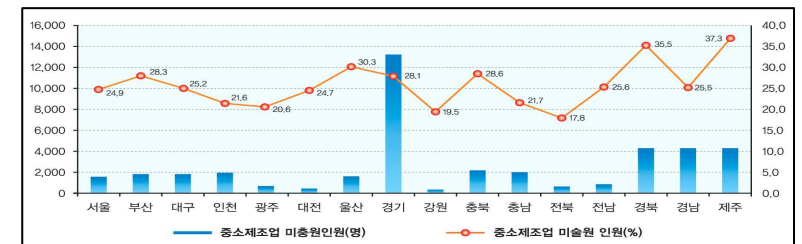
중소기업	미충원 인원
5~29인 사업장	46,637명 (54.1%)
30~99인 사업장	24,711명 (28.7%)
100~300인 사업장	14,878명 (17.2%)
총계	86,226명 (100%)

- 직능단계별로는 현장기능인력(50%)과 단순생산인력(35%)이 다수

구분 (단위: 명)	2011년		2012년		2013년	
	상	하	상	하	상	
300인 미만	단순생산인력	43,303	48,888	34,317	33,474	28,222(35%)
	현장기능인력	38,222	42,813	31,360	38,033	41,288(50%)
	고급기술인력	18,681	18,477	13,497	12,017	12,228(15%)

※ 직능단계별 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제외

- 미충원인원은 산업단지가 많은 비수도권·비광역권이 상대적으로 높음
<지역별 중소기업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13.4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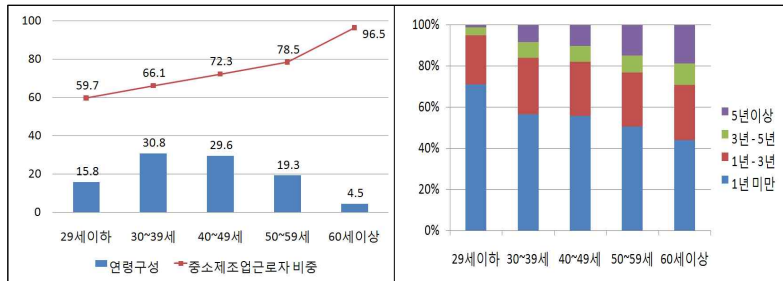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전문대 이하의 현장인력을 요구하나, 높은 대학 진학률로 구직자의 눈높이가 상향, 대학 취업률 감소로 이어짐

※ 취업률(%) : <전문대> ('06) 79.5 → ('13) 61.2, <대학> ('06) 60.0 → ('13) 55.6

※ 대학생 절반 이상(52.7%)이 신입직원 연봉으로 '3천만원 이상' 희망한 반면, 3천만원 이상을 대졸초임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8.2%에 불과 ('12.4, 대한상의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사 및 미스매치 실태조사')

○ 특히, 중소기업의 청년 비중이 낮은 상황(15.8%)으로 젊을수록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중(59.7%)도 낮고, 근속기간도 짧아짐

<중소제조업 근로자 연령구성 및 비중('13.4)> <중소제조업 이직자의 근속기간 현황('12년)>



※ 대졸 과잉인력(최대 42%)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져 GDP 성장률 1%p 상승 기회를 상실(SERI, '12.6.)

□ '20년까지 핵심노동인구인 15~29세(연평균 -2.2만명), 30~54세(연평균 -3.7만명) 비중은 축소되고 55세 이상 비중(연평균 29.8만명)은 증가 예상



※ 중장기인력수급전망('11~'20)

2 인력수급 불일치의 원인

① (숙련의 불일치)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으로 취업자의 직무 능력이 중소기업 현장 수요와 괴리

○ 고학력화,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쏠림, 고령화로 인한 핵심 근로인력의 감소,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 부족

※ 향후 10년간 고졸은 32만명 초과수요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50만명 (전문대 22만명, 대학 26.5만명, 대학원 1.5만명)이 초과 공급(중장기인력수급전망)

○ 향후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할 숙련된 핵심근로인력 감소 예상

② (보상의 불일치)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는 임금·복지·장래성 등 3低 문제에서 기인

○ 미스매치의 근본원인인 보수 및 직업전망 개선 미흡 ('13.6월)

- (낮은 임금) 중소기업 : 대기업 = 66.7 : 100

- (낮은 복지) 중소기업 : 대기업 = 52.6 : 100

- (장래성) 중소기업 취업기피 요인 1위(35.2%)

③ (정보의 불일치) 구직자는 기업(채용) 정보, 기업은 필요인력 정보 및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 대학생 구직애로 요인 중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가 31.6%로 가장 많음 (청년패널 '11년 조사 결과)

○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정보 부족, 분산된 정부 지원체계,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인프라* 미흡

※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지출 비중(%) : (OECD 평균) 24.2/25.8, (한국) 2.4/16.7

❖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기업은 '열악한 근무여건', 10~200인 기업은 '취업지원자 없음', 200~300인 기업은 '직무능력 미흡' 때문에 인력부족 발생('12년, 중기청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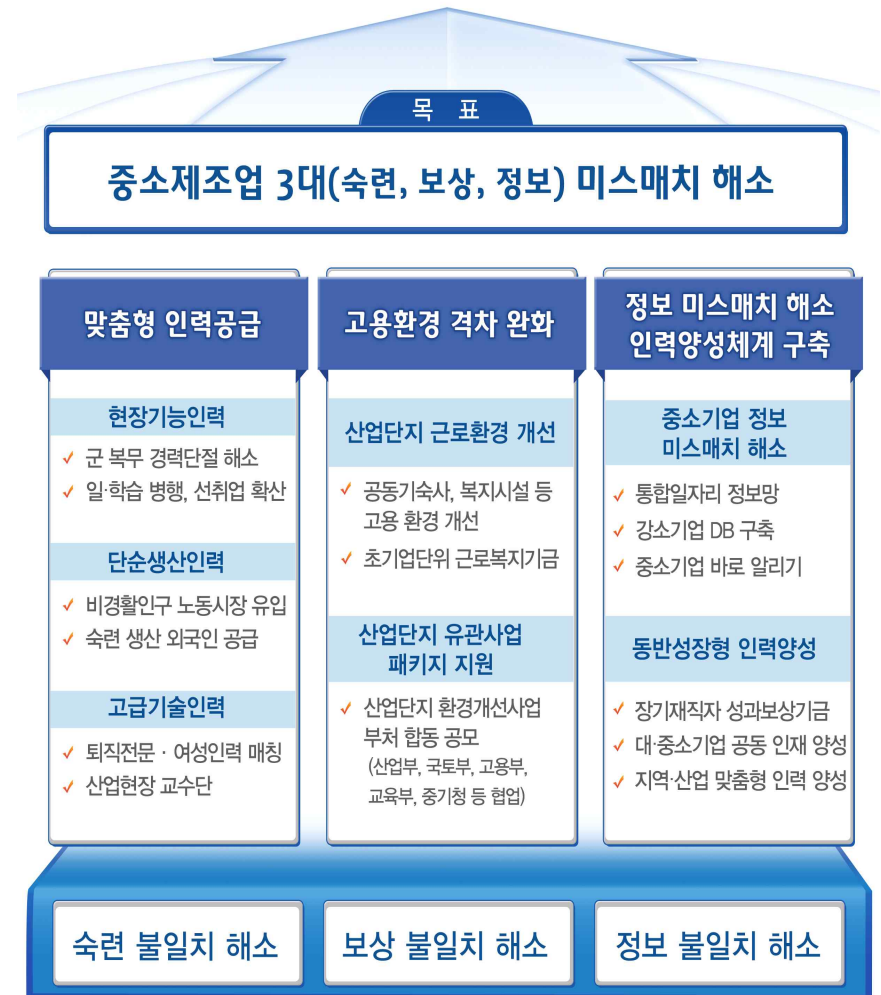
3. 그간 정부 대책 현황 및 평가

- 고용부, 기재부, 중기청, 교육부, 산업부 등에서 다양한 정책 추진
 -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09.12)」,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제1차 ’05~’09, 제2차 ’11~’15),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 고용강화 방안」(1차 ’11.9, 2차 ’12.7) 등
 - ※ (주요과제) 직능수준별 인력양성, 근로환경 개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산업구조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인식개선 사업 등
 - 그럼에도, 중소기업 근로환경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한계가 있었고, 현장에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거버넌스도 부재
 - ※ 「고용률 70% 로드맵」: 스펙초월 및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고용·복지 연계로 비경활인구 노동시장 유입, 파견업종의 합리적 조정, 고용창출형 중소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포함
- 그간 정부 대책을 재검토하여 자치단체와의 연계 등 현장에서 잘 작동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구분	기존 대책	이번 대책
대상	청년층 대책이 다수 대상별 맞춤형 대책 미흡	정책 대상(단순, 기능, 고급인력) 특성별 대책수립 → 중소기업 미스매치 완화에 집중
운영지원 체계	중앙정부 중심 (분산된 지원체계)	중앙정부·자치단체 연계 강화 (통합 지원 체계)
주요 추진과제	취업계층 근로·복지 연계 미흡	① 취약·핵심인력의 노동시장 유입 강화
	수요측면의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미흡	②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등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 촉진
	사회적 인식 및 인프라 미약	③ 중소기업 정보제공 강화 및 바로알리기
점검평가	실적확인 수준으로 환류 불충분	컨트롤 타워 구축 현장점검단 구성, 현장애로 해소

II.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중소기업 미스매치 완화로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



1 취업·핵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 미충원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기능인력(50%)**과 **단순생산인력(35%)**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층 경력단절 해소, 선취업 확산,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 등 촉진

1 현장기능인력: 청년층 경력단절 해소와 선취업 확산

❖ 청년층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와 **일·학습 병행**을 통한 **유망 경력경로(career-path) 개발** 등으로 중소기업 선취업 촉진

□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현장에서 듣는...

“특성화고 졸업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병역문제 때문이지요. 유능해도 우리가 3년을 기다려줄 수도 없고, 제대 후 우리 회사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충북 B사)

○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청년층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관공서 공익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단계적 전환**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규모: '13년 3,000명 → '14년 4,000명 → '17년 5,500명

- **뿌리산업, 산학연계** 우량 중소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중소기업 재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정

※ 관공서의 감축된 인력은 필요시 여성, 장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대체

○ **(맞춤특기병제 신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기술병으로 선발하는 **'맞춤특기병제'** 신설('14년 1천명 시범 후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특기병으로 선발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 군복무(기술병) → 전역 시 취업지원

○ **(특성화고 군복무 다원화)** 특성화고 졸업생의 **기술부사관·준사관·장교*** 등 복무기회 확대 및 제대 후 재취업지원 강화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 일·학습병행을 통해 학사를 취득한 특성화고 출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장교 입대 기회** 확대

□ 일·학습 병행 지원으로 선취업 촉진 (Career-path 개발)

현장에서 듣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문기술은 못 배우고 단순 업무만 맡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공과는 관계없는 음식점 같은 곳에 취업해요.” (인천지역 특성화고 학생)

○ **(일·학습 듀얼시스템)** 기업에서 체계적 **현장학습**과 **학교의 현장중심 교육**을 연계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 도입

○ **(유망 경력경로 개발)** 고졸자가 바로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선취업**하더라도 **장교, 명장, 교수** 등 다양한 **경력경로 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하여 평생경력개발경로(학교→선취업→능력개발 및 보직경로)를 개발, 기업·학교에 보급('14년)

○ **(선취업 확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13년 18백명→'17년 36백명) 및 **산업계 관점 대학교육 강화***

* 학사제도 유연화, 국립대 등 재직자 특별전형('12년 60여개 대학) 확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3년 2,184억원, 51개 대학) 지원 강화

※ 사립대학 잔여재산 귀속 특례 규정 마련으로 **자율적 구조개혁** 유도('13년下~)

2 단순생산인력: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

❖ **취약계층(저소득 비경활인구, 장년 등)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및 **양질의 숙련외국인력** 공급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학교 밖 **위기청소년(소년원 등)** 대상 맞춤형 훈련과 중소기업 연계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취업목표: '13년 13천명 → '14년 17천명

○ (퇴직자 원스톱 서비스) 퇴직 전 전직훈련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 확대(90일 이내 이직예정자 → 180일로 확대, '13년말)

-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 중 생산직 희망자(13.5%) 전직지원서비스 통합 제공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13년 25개→'14년 47개)

○ (정부인턴사업 개편) 청년·장년인턴, 새일여성인턴, 시니어인턴 등 각 부처 정부인턴사업을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14년)

※ 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 지원수준 우대(예: 청년인턴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시 정규직 전환 시 근로자에게 취업지원금(2백만원) 지급)

사업명	대상기업	지원기간 및 금액	'14년
청년인턴(고용부)	중소기업	6월(인턴)+6월(정규직)=870만원	37천명
장년인턴(고용부)	중소기업	4월(인턴)+6월(정규직)=710만원	8천명
새일여성인턴(여가부)	전 규모	6월 300만원	5천명
시니어인턴(복지부)	전 규모	3월(인턴)+3월(상용직)=180만원	5천명

○ (숙련 외국인력 적정 공급) 숙련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섬유 등)은 현지 직업훈련을 마친 '숙련외국인력 공급방안' 시행 ('14년, 시범실시)

3 고급기술인력: 퇴직전문인력과 여성의 중소기업 연계 강화

○ (퇴직전문인력 활용) 수출, 마케팅, 관리 등 대·중견기업 퇴직자의 분야별 Pool 구성, 채용 장려금*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 전문인력 1명당 사업주에게 연간 1,080만원 지급 (매년 1.5천명)

○ (산업현장교수단 확대) 퇴직전문인력의 숙련기술 전수, HRD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향상 지원('13년 300명→'17년까지 1천명)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전문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켜 교육훈련 후 대상기관 취업 지원('13년 58명→'17년 500명)

○ (전문연구요원 업체 확대) 석·박사 병역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중소기업 선정 확대('12년 31.3%<136개>→'17년 60%<262개소>)

○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12년 7%→'17년 15%),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 인력 확대('13년 0.7천명→'17년 1.5천명)

2 대·중소기업 간 고용환경 격차 완화

1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 산업단지 공동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유인 강화

현장에서... L N

“어른들이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말을 하는데,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학생들이 눈을 낮추지 않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환경부터 대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크니깐요.” (서울지역 대학졸업생)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기숙사, 식당, 교통편의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지원 확대

- (공동기숙사) 자치단체와 매칭으로 기숙사, 문화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신설('14년 신규 50억원, 6개소)

- (교통편의) 공동 통근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확대(현재 9개 →약 20개), 노선버스 신설·증차 등 근로자들의 교통불편 해소

- (복지시설) 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 지원(매년 2개소), 체력증진·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지원('14년 신규 100억원)

- (보육·문화시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확대('14~'15년 100개소) 및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을 신설('14년 125억원)

* 근로자 수요 조사 후 개별 여건에 적합한 어린이집(국공립, 직장 등) 설치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산업단지내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 허용(산집법 시행규칙*), 근로자 지원시설** 등 정주여건 확충

* 현재는 '공장 부대시설'로서 주거시설은 해당공장 임직원만 활용 가능

** 호텔, 오피스텔 등 민간투자 확대 유도(QWL 밸리조성, '14년 130억원)

- (입주업종 다양화) 혼합적 토지이용(산업+지원+공공시설)이 가능한 '복합용도제' 허용 및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 범위 지속 확대

○ (초기업 단위 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역 단위 근로복지기금 조성 (공동 기숙사 등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세제혜택(손비 인정)

2 산업단지 유관사업 패키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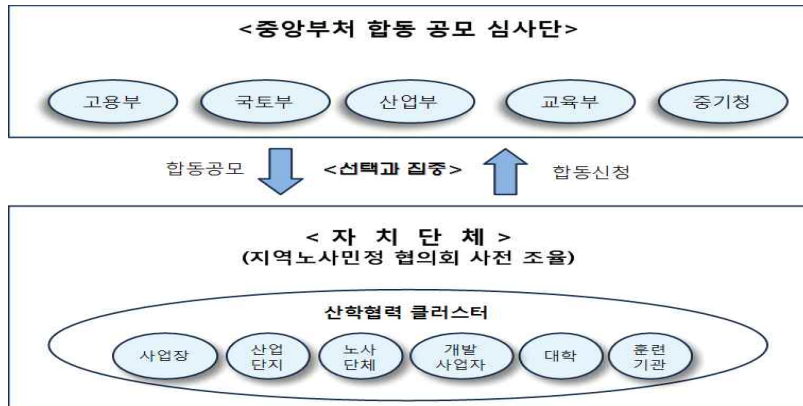
❖ 각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합동 공모·심사방식**을 통해 **선택과 집중** ⇒ 부처 협업형 모범사례 창출

○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문화·복지·보육시설, 교통편의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패키지로 **통합 지원**

- ① 각 부처 사업 **합동 공모** (합동 공고 등)
- ②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인 우선순위 배분** 및 **사전 조정**을 거쳐 각 사업을 연계한 **공모 신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결)
- ③ 각 부처 **공동 심사·선정** (합동 심사위원회 구성)
- ④ 자치단체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창조적 집행

<각 부처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유관사업(예시)>

-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호텔, 문화·복지시설, 산학 융합지구)
- **국토부**: 미니복합타운사업(산단조성,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산단재생사업
- **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사업(체력단련실, 목욕시설)
-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대학)
- **중기청**: 중소기업 건강진단프로그램(컨설팅)



3 정보 미스매치 해소 및 인력양성체계 구축

1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

❖ 중앙-지방-민간의 **통합일자리 정보망 구축**,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기능 강화, **중소기업 이미지개선** 등 바로 알리기 확산

현장에서 듣는...

“중소기업의 향후 성장가능성과 비전, 기업문화 등 중소기업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준비생 H군)

- **(통합일자리 정보망 구축)** 중앙-지방-민간의 분산된 **일자리 정보망 통합**,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DB*** 구축('14년)
 - * 청년층 '청년포털' 및 '대학별 워크넷' 구축, 장년층 '채용기업정보DB',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적 일자리DB' 등 특화된 기업·채용 DB 확충
 - ※ 「통합일자리 정보망 구축방안」 마련 (10월중)
-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제공)** '강소기업'(1만개)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손쉬운 검색기능과 현장정보 강화 등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
 - ※ 현재 약 1만 5천개인 강소기업 중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을 제외하고, 지역·업종·규모별로 검색기능 강화, 현장방문 후기, 사진·동영상 등 게재
 - 수요자 중심의 생생한 **기업정보**와 실시간 **구인정보** 등 강소기업 **일자리정보**를 민간·대학·자치단체 등에 지속 제공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혁신형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탐방·직장체험**,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등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 확산
 -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해 '**일터혁신 프로그램**' 등 교육·인사 경영컨설팅 확대 ('13년 400개소→'17년 700개소)
 - 고용개선, 노무관리,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우수 중소기업** 발굴·공중파 방송 홍보 등 중소기업 대국민 인식개선

2. 동반성장형 인력양성으로 인력공동관리체계 정착

❖ 장기재직 유도 인센티브와 대·중소기업 공동 인재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공동관리체계 정착

현장에서... 현장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3년 정도 근무하고 회사가 쓸만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H사)

“중소제조업은 임금이 기업 이윤과 관계없이 약속이나 한 듯이 최저임금 수준 이라서 장시간근로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안됩니다.” (안산지역 취업담당자)

- (장기재직자 성과보상기금 도입) 중소기업 5년 근무 시 기업(1/3)과 본인 납입금(2/3)으로 구성된 성과보상기금 수령, 세계지원* (‘14년 신규)
 - * 기업 납입금의 법인세 손금처리, 중도 퇴사 시에는 본인 납입금만을 수령, 기업 납입금은 추가 지정하는 핵심인력 납입금으로 사용
- (성과배분제 확산) 기업이익(경영성과금)을 퇴직연금(DC)에 추가 납부토록 유인*하는 (이연)성과배분제 확산(임금체계개편모델 개발)
 - * (근로자) 소득세율(12백만원~45백만원) 약 15% → 약 3%로 감소 (사용자)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감소로 절세 효과, 4대 보험료 감소
- (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강화) 대·중소기업 합동 채용·인력양성 협약 확산, 장기재직자 인재양성 및 교류 지원 (‘14년)
 - ※ 원하청 합동 채용행사(원하청 채용사이트 연계) → 공동훈련 컨소시엄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중심으로 대기업 교육훈련시스템 공유(사내대학, HRM지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단위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인력수요조사→훈련→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확산 (‘13년 4개 지역 시범 → ‘17년 전국 확대)
 - ※ 인천, 천안·아산,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추진, 협약기업 2,767개소 참여, 훈련인원 12,718명, 예산 368억원 지원

III. 향후 추진계획

❖ 범정부적인 추진·점검 체계와 전국 고용센터별 전담TF 구성, 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

- (추진체계)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기재부 1차관)를 통해 핵심과제 추진 상황 상시 점검·피드백
 -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중소기업 미스매치반’을 구성하여 추가 정책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보완
 - * 반장: 기재부 차관보, 공동간사: 기재부·고용부·중기청 국장
민간: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대, IBK 경제연 등
- (고용센터 전담TF) 전국 고용센터에 “중소기업 인력수급 전담TF”를 구성하여 산업단지 빈일자리 채우기 등 적극 노력
 - 시·도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알선반’을 설치, 지역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
- (자치단체 연계 강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노력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의 참여 촉진
 - 지역단위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프로젝트(현재 79개)’ 추가 발굴, 애로해소 등 대책의 취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활동 강화
 - ‘중앙단위 부처 합동 공모’와 ‘지역단위 인력공동관리체계’ 등 중앙-지방 연계 확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등 적극 안내)
 - * 각 부처 지원사업을 자치단체 단위로 ‘합동 공모, 집중지원’함으로써 중앙부처 사업의 선택과 집중(모범사례 발굴)

붙임 중점 추진과제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 부처	
		주관부처	협조부처

1. 취약핵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1-1. 현장기능인력

1-1-1.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①보충역자원의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14년上~	병무청	기재부
②맞춤특기병제 신설	'14년上~	병무청	고용부
④특성화고 졸업자 장교·기술부사관·준사관 연계 강화	'14년上~	국방부	
1-1-2. 일·학습 병행 지원으로 선취업 촉진			
①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추진	'13년下~	고용부	기재부 교육부
②평생경력개발경로 개발 및 기업·학교 등 보급	'13년下~	고용부	교육부
③희망사다리 장학금 대상 확대	'14년上~	교육부	
④산업계 관점 대학교육 강화	'14년上~	교육부	
⑤사립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유도	'13년下~	교육부	

1-2. 단순생산인력

①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13년下~	고용부	
②퇴직(예정)자 원스톱 서비스	'13년下~	고용부	
③정부인턴산업 중소기업 지원 중심 개편	'14년上~	고용부 여성부 복지부	
④숙련외국인력 공급방안 시행	'14년上~	고용부	

1-3. 고급기술인력

①퇴직전문인력 재취업 지원	'13년下~	고용부	
②산학현장교수단을 통한 중소기업 숙련기술 전수지원	'13년下~	고용부	
③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13년下~	미래부	
④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중소기업 선정 확대	'14년上~	병무청	
⑤출연연구소 중소기업 지원 인력 확대	'14년上~	미래부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 부처	
		주관부처	협조부처

2. 대·중소기업 간 고용환경 격차 완화

2-1.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①산업단지 공동기숙사,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 지원	'14년上~	산업부	
②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허용 등 교통불편 해소	'13년下~	국토부	
③산업단지 복지시설(복지관, 체력증진·목욕시설 등) 지원	'14년上~	고용부	안행부
④산업단지 보육시설 설치 확대	'14년上~	복지부 고용부	산업부 여성부
⑤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14년上~	산업부	국토부
⑥산업단지 입주업체 다양화	'14년上~	산업부	
⑦초기업 단위 근로복지기금 조성	'14년上~	고용부	기재부

2-2. 산업단지 유관사업 패키지 지원

①부처 합동공모를 통한 모범사례 창출	'14년上~	고용부	관계부처
----------------------	--------	-----	------

3.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정보 미스매치 해소

3-1.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

①통합 일자리 정보망 구축	'14년上~	고용부	관계부처 자치단체
②장소기업 일자리정보 제공	'13년下~	고용부	
③중소기업 바로알리기 프로그램 확산	'13년下~	교육부 중기청 여성부	
④일터혁신 및 사업주 교육·인사경영컨설팅 확대	'13년下~	고용부	
⑤중소기업 대국민 인식개선	'13년下~	중기청	

3-2. 동반성장형 인력양성으로 인력공공관리체계 정착

①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성과보상기금 도입	'14년上~	중기청 기재부	
②성과배분제 확산 및 임금직무체계 개편 모델 개발	'13년下~	고용부	
③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 강화	'14년上~	산업부 고용부	
④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13년下~	고용부	관계부처